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제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를 중심으로

임상순(동국대학교)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고백으로 공식화된 일본인 납치문제는 2013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 공동체의 주목을 받는 국제 인권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및 의회는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본 귀국,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충분한 설명 제공, 납치범의 인도를 3대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립하고,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를 내부 단결 및 선군정치의 합리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범죄를 강조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가 일본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납치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의 강도를 낮추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 특히, 북·일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강경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정책의 지속은, 납치문제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치문제 해결이라

* 이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는 전략 목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주제어: 북·일정상회담, 일본인 납치자 문제, 선군정치, 유엔인권레짐,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인권법, 납치문제 대책본부

1. 서론

2013년 6월 18일 G8정상은 ‘G8 Lough Erne 2013’을 마감하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부를 향하여 국제 공동체의 관심사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¹⁾ 이를 통하여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고백으로 공식화된 일본인 납치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국제 공동체의 주목을 받는 국제 인권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일본에서 처음 보도된 것은 1985년이다. 당시 한국 국가안전기획부는 일본인으로 위장 활동하던 북한 간첩 신광수를 체포했는데 신광수는 일본인 하라 다다아키(原敕晁)를 납치하여 북한에 억류한 후, 그의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자백했다.²⁾ 하지만 일본인들이 납치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이다. 1998년 여름, 일본 미

1) “2013 G8 Summit Communique” <http://www.mofa.go.jp/files/000006559.pdf>(검색일: 2013.6.1).

2) 重村智計, 『最新 北朝鮮データブック』(東京: 講談社, 2002), pp. 36~38.

디어는 대포동 1호 시험발사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였고, 서점에는 일본인 납치를 설명하는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2002년 일본인 납치에 대한 김정일의 인정은, 일본 국내 정치 담론에서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낙인찍도록 만들었고, 일본의 정책결정자들과 시민 사이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³⁾ 이후 납치문제는 일본 총리 아베(安倍晋三)의 표현대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서, 일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으며 납치 피해자 전원을 귀국시키지 못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郎)의 북·일정상회담에 대하여 굴욕 외교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등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온건파⁵⁾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⁶⁾

한편, 북한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는 대응하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일의 고백 때문이다.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말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최고 뇌수⁷⁾’의 교시로서 ‘아무도 의심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⁸⁾’이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이나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확

3) Christopher W. Hughes, “‘Super-sizing’ the DPRK threat - Japan’s Evolving Military Posture and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49, No. 2(2009), p. 294.
 4) 荒木和博, “屈辱外交に「ノー・コイズミ」を,” 『月刊諸君』 第36巻 7号(2004), 214쪽.
 5) 津田塾大學教授 和田春樹 등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함께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범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和田春樹, “拉致問題と過去の清算,” 『拉致問題と過去の清算－日朝交渉を進めるために』(東京: 彩流社, 2006), pp. 15~18.
 6) Norimitsu Onishi, “Japan Rights Fan Fury Over North Korea Abductions,” *New York Times*, December 17, 2006.
 7)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448쪽.
 8)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35쪽.

실성과 영구성을 가진다. 사실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라는 과거 국가범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북·일국교정상화를 조기에 타결하고자 하였다.⁹⁾ 당시 일본은 과거 청산 비용으로 10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¹⁰⁾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북·일국교정상화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그동안 ‘일본인 납치 의혹은 일본의 날조’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왔던 조총련을 심각하게 동요하도록 만들었다.¹¹⁾ 북한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도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북한의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 메커니즘을 구축·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이라는 가해국, 일본이라는 피해국 그리고 납치 피해자라는 피해 대상으로 구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현재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사학위논문은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고 학술 논문도 그리 많지 않다. 납치문제를 다룬 학술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주제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납치문제를 포함시킨 경우이고, 두 번째는 납치문제를 중심 주제로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일정상회담 및 국교정상화 협의 과정에서의 납치문제연구¹²⁾

9) 月刊世界編輯部, “特集 日朝關係 「不正常」から「正常」へ,” 『月刊世界』 制707号 (2002), 51~52쪽.

10) 마이크 치노이(Mike Chinoy), 『북핵 롤러코스터』, 박성준·홍성걸 옮김(서울: 참언론 시사IN북, 2010), 201쪽.

11) 『동아일보』, 2002년 9월 27일.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관련된 납치문제연구¹³⁾를 들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 연구,¹⁴⁾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에 미친 영향 연구¹⁵⁾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연구한 논문이¹⁶⁾ 있다. 이외에도 일본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일본인 납치문제 내용 분석 연구,¹⁷⁾ 납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을 다룬 논문¹⁸⁾ 등이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일본의 전략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및 유엔인권레짐의 공식문서 분석과 북한의 『로동신문』 등 공간자료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중심 기간은 김정일의 고백으로 납치문제가 공식화된 2002년 9월 제1차 북·일정상회담부터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이전 김정일 정권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차

- 12) 오일환, “북·일 평양 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26집(2003); 강태훈, “북일수교의 전망과 한일관계,” 『일본학연구』, 제19집(2006).
- 13) 김준섭,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응,” 『국제평화』, 제4권 1호(2007).
- 14) 이종국, “일본의 대 북한정책의 변화: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27호(2008).
- 15) 이기완,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의 본질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제19집 3호(2012).
- 16) 손영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3권(2007).
- 17) 오일환, “북한 핵·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기술의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제30집(2008).
- 18) 김동한, “한·미·일 북한 인권법 비교분석,” 『북한학연구』, 제4권 2호(2008).

후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2.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 목표와 두 가지 전략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의 국가 주권 및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 북·일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으며”¹⁹⁾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본 귀국,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충분한 설명 제공 그리고 납치범들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²⁰⁾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6자회담 양자협약에서 위의 세 가지 전략 목표, 즉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북한의 설명 제공, 납치범 인도를 납치문제 해결 조건으로 북한에 제시하였다.²¹⁾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략 메커니즘을 형성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 메커니즘의 모형과 이론적 구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회현상이 (국제)사회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만한 객관적인 현실이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²²⁾ 그리고 (국제) 사회문제는

19) 拉致問題對策本部, 『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歸國をめざして—北朝鮮側主張の問題点—』(東京: 拉致問題對策本部 事務局, 2011), p. 7.

20) Media FAQ November 2, 2007 ‘Abductions of Japanese Nationals by North Korea’ <http://www.mofa.go.jp/announce/media/2007/11/1102.html#2>(검색일: 2013.6.9).

21) 『동아일보』, 2006년 2월 6일.

<표 1>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 메커니즘

전략 목표	납치문제 해결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북한의 충분한 설명 제공	납치범 인도
	↑	↑	↑
기본 전략	여론형성 전략		압력행사 전략
전략 의회	청문회 개최		북한 인권법 등 관련 법률 제정
방법 내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외교활동		유엔인권레짐과의 협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압력을 수반하게 된다.²³⁾ 즉 사회문제는 객관적인 현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개선을 위한 압력의 종합적 결합물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정의는 일본의 납치문제 기본 전략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매우 유용하다. 즉 납치문제와 관련된 객관적 현실이 김정 일의 고백에 의해서 명확히 확인되었고, 일본 내각과 의회는 국내외 여론형성 전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납치사건을 문제로 의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일본이 활용하고 있는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 전략들이 세 가지 전략 목표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2) Jon M. Shpard and Harwin L. Voss, *Social Problems*(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8), pp. 1~2.

23) Paul B. Horton et al.,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New Jersey: Printice Hall, 1997), p. 4.

1) 의회와 내각의 여론형성 전략

의회는 중의원 산하에 납치문제를 전담하는 납치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 담당 관리, 학계 전문가, 피해자 가족, 전 북한 공작원 및 한국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한편, 내각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 본부를 조직하고, 이 기구를 통해 납치문제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교활동을 통해 국제 여론을 조성한다.

(1)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개최²⁴⁾

2004년 11월 30일 중의원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등에 관한 제반 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25명 규모의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²⁵⁾

일본 중의원의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지 않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회의의 결의에 따라 중의원에 설치된다.²⁶⁾ 2004년 11월 30일 설치된 ‘납치문제 특별위원회’는 설치 당일 제161회 1호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이사를 선임하였고, 다음 달 2일에 제161회 2호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건, 폐회 중 심사에 관한 건, 북한

24)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の會議録議事情報一覽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kaigiroku.htm (검색일: 2013.6.2).

25) 官報 号外 平成 十六年 十一月 三十日 “第百六十一回 國會 衆議院會議錄 制十四号,” p. 1.

26) 이종국, “일본의 대 북한정책의 변화: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138~139쪽.

<표 2>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개최 청문회 횟수 및 참여 인원 현황(회/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청문회 횟수	2	5	6	3	4	0	2	3	25
정부 참고인	18	34	31	17	29	0	2	7	138
민간인 참고인	0	2	5	0	3	0	5	0	15

자료: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の會議記録事情報一覽.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kaigiroku.htm (검색일: 2013.6.2).

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건을 처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의 중심 활동은 청문회 개최이다. 납치문제 특별위원회는 정부 참고인과 민간인 참고인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통하여 대북한 정책에 대한 ‘압력’ 중심의 국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²⁷⁾ 납치문제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 및 참여 인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2회 이상의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민간인 참고인보다 정부 참고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론형성과 정책제안에서는 민간인 참고인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한 민간인 참고인들의 인적 사항과 청문회의 중심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청문회에 참가한 민간인 참고인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인 증인(납북자 단체 및 북한 공작원) 4명,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 5명, 일

27) 위의 글, 132쪽.

<표 3> 납치문제 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 민간인 참고인 증언 중심 내용
및 증언자 인적 사항

개최 날짜	증언 중심 내용	증언자 인적 사항	
2005년 (7월 28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한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납치 관련 북한 현실 증언 (시민단체 및 전 공작원 증언)	西岡力	납치 일본인 구출회 ²⁸⁾ 부회장
		안명진	(전) 북한 공작원
2006년 (5월 29일)	·납치 피해자 가족 고통 호소 및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한국과 일본의 협력 필요성 강조 (한일 납치 피해자 가족 증언)	横田滋	납치 피해자 가족회 ²⁹⁾ 대표
		横田早紀江	납치 피해자 가족회 회원
		최계월	한국 납북자 김영남의 어머니
		최성용	한국 납북자 가족회 대표
		김영자	한국 납북자 김영남의 누나
2008년 (4월 10일)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정 세 분석 ·제재 및 보상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 (전문가 의견 발표)	伊豆見元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宇惠一郎	요미우리신문 동경본사 편집위원
		重村智計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교수
2010년 (11월 4일)	·조총련계 학교 정부지원 반대 ·북한의 주장에 대한 불신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호소 (납치 피해자 가족 및 시민단체 증언)	飯塚繁雄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横田滋	납치 피해자 가족회 전 대표
		増元照明	납치 피해자 가족회 사무국장
		西岡力	납치 일본인 구출회 전국협의회회장
		荒木和博	특정실종자조사회 ³⁰⁾ 대표

자료: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の會議錄議事情報一覽.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kaigiroku.htm(검색일: 2013.6.2).

본 내 납치 관련 시민단체 회원 3명, 전문가 3명으로 다양하게 조직되
었다. 참고인들이 청문회에서 주로 강조한 것은 납치 피해자의 전원
귀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었다. 이들 청문회는 대중매체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납치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부
정적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28) 소속기관의 공식명칭은, ‘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國協議會’.

29) 소속기관의 공식명칭은, ‘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家族連絡會’.

30) 소속기관의 공식명칭은, ‘特定失蹤者問題調査會’.

(2) 납치문제대책본부 설치³¹⁾ 및 국내외 여론 형성

북한과의 납치문제 협상 과정에서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기를 얻어, 최연소 총리가 된 아베 총리³²⁾는 2006년 9월 29일 내각 결정을 통해,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³³⁾ 이 대책본부는 2009년 10월 하토야마 총리 내각에 의해 해체되고 새로운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대체된다. 하토야마(鳩山由紀夫) 내각은 납치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부분부장에 외무장관을 추가하였고, 각 부서가 통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락회의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을 내각 관방성에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³⁴⁾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주요 임무에는 납치문제에 관한 대응 협의 및 대책 마련, 조사 및 진상 규명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임무는 납치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³⁵⁾ 이를 위해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첫째, 납치문제대책본부 주최 ‘강연회 및 집회’를 개최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지방 국민 모임’을 주최하였으며, 셋째, 책자 및 기타 콘텐츠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일본 내각은 이러한 국내 여론 형성 활동과 함께, 양자 회담 및

31)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拉致問題對策本部’ <http://www.rachi.go.jp/jp/shisei/index.html>(검색일: 2013.6.3) 발표 자료 활용.

32) 『동아일보』, 2006년 9월 28일.

33) ‘平成 18年 9月 29日/ 閣議決定’ <http://www.rachi.go.jp/shisei/taisaku/kettei.html> (검색일: 2013.6.13).

34) ‘平成 21年 10月 13日/ 閣議決定’ <http://www.rachi.go.jp/jp/shisei/old.housin.html> (검색일: 2013.6.13).

35) 拉致問題對策本部,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p. 8.

다자회담을 활용하여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외교활동 중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및 미국 정상과의 회담 그리고 6자회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납치문제대책본부 주최 ‘강연회 및 집회’

2006년 6월 23일 발효된 『북한 인권법(납치문제와 그 이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납치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인권침해문제 주간’을 매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에 이 법률의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이 규정에 따라 <표 4>와 같이 매년 이 주간에 ‘강연회 및 집회’를 주최하고 있다. 또한 <표 4>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매년 정부 고위 관계자와 납치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한다. 특히 2009년에 집권한 하토야마 내각은 행사명을 이전의 ‘생각하는 모임’에서 ‘구출하는 모임’으로 바꾸고, 외국 대사들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납치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연회와 심포지엄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을 호소하였고 납치문제 담당 대신은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36) ‘拉致問題その他 北朝鮮當局による人權侵害問題への對處に關する法律’, http://www.shungiin.go.jp/itdb_housei_nsf/html/housei/16420060623096.htm?OpenDocument(검색일: 2013.6.14).

<표 4> 납치문제대책본부 주최 ‘강연회 및 집회’ 현황

연도	행사명	행사 내용	주요 참여자
2006년	납치문제를 생각하는 모두의 모임	강연회 및 메구미 사진전	총리, 납치 피해자 가족
2007년	북한인권 상황과 납치문제	국제 심포지엄	인권 담당 대사, 전문 패널리스트
	납치문제를 생각하는 모두의 모임	강연회 및 영화 <메구미> 상영	납치문제 담당 대신, 납치 피해자 가족
2008년	납치문제를 생각하는 모두의 모임	대담 및 영화 <메구미> 상영, 콘서트	납치문제 담당 대신, 납치 피해자 가족
2009년	모든 납치 피해자 구출을 향하여	강연회	납치문제 담당 대신, 북한문제 연구 전문가
2010년	모든 납치 피해자 구출을 향하여	심포지엄	납치문제 담당 대신,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2011년	모든 납치 피해자 구출을 향하여	심포지엄 및 콘서트	납치문제 담당 대신
	각국 대사 대상 <메구미> 상영회	영화 <메구미> 상영	100개 공관 외교관

자료: ‘拉致問題対策本部’ <http://www.rachi.go.jp/jp/shisei/index.html>(검색일: 2013.6.3).

② 납치문제대책본부 및 지방정부 공동개최 ‘국민 모임과 책자 및 콘텐츠 보급

납치문제대책본부는 2008년 6월 8일 후쿠시마에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구출을 위한 국민 대집회’라는 ‘국민 모임’을 최초로 실시한 이후, 2011년 말까지 ‘국민 모임’을 모두 16회 개최하였다. 이 ‘국민 모임’은, 지방정부 및 지방주민들이 납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행사 내용은 강연회 또는 정부 보고, 가족 메시지, 영화 <메구미(横田 恵)> 상영 등으로 이루어진다. 행사 개최 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모임’은 매년 평균 4회 개최되었고 지역 분포도 매우 넓다. 그런데 총 행사 16건 중 행사 참여 인원

<표 5> 납치문제대책본부와 지방정부 공동개최 ‘국민 모임’ 현황

날짜	장소	인원	날짜	장소	인원
2008. 6. 8	후쿠시마	1,000명	2008. 7. 6	이와테	1,000명
2008. 8. 24	에히메	3,000명	2008. 8. 24	도야마	1,100명
2009. 7. 4	삿포르	250명	2009. 9. 5	가가와	900명
2009. 11. 7	후쿠이	1,300명	2010. 1.13	오사카	720명
2010. 9. 23	삿포르	250명	2010. 10. 17	돗토리	200명
2010. 11. 14	지바	500명	2010.12. 19	구마모토	500명
2011. 1. 26	가고시마	600명	2011. 2. 25	가나가와	350명
2011. 10. 5	도쿄	750명	2011. 11. 9	요나고	400명

자료: ‘拉致問題対策本部’ <http://www.rachi.go.jp/jp/shisei/index.html>(검색일: 2013.6.3).

이 1,000명 미만인 행사가 무려 11건에 이른다.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참여 저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지역 주민들의 납치문제에 대한 무관심(4.7%)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고(48.6%), 행사 내용이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12.1%)이다.³⁷⁾ 이 행사의 중심 내용은 납치 피해가족들의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호소와 이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다짐이다.

이러한 행사들과 함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4권의 소책자와 3종류의 팸플릿, <메구미> 만화 및 동영상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과 노년층 그리고 납치문제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을 홍보한다.

37)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の概要, 平成 24年 7月 19日 内閣府政府広報室. <http://www8.cao.go.jp/survey/tokubetu/h24/h24-rachi.pdf> (검색일: 2013.6.7).

(3) 양자 및 다자회담을 통한 국제 여론 형성

일본 내각 지도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과 구체적 시책’에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계 각국과의 긴밀한 연계 및 각종 국제회의를 활용한 국제 여론 강화를 강조한다.³⁸⁾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한국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제기한 납치 관련 내용과 상대국의 반응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모든 총리는 한국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 특히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상의 반응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적극적이며 특히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하는 등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보다 더 일본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납치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등 이전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자회담과 함께 일본은 다자회담을 통해서도 납치문제를 공문화하고자 노력했다. 그 대표적인 다자회담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일 2차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2007년 7월 20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합의한 9·19공동선언(2005년 9월 19일), 1단계 조치에 합의한 2·13합의(2007년 2월 13일), 2단계 조치에 합의한 10·3합의(2007년

38) 拉致問題對策本部,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 p. 8.

<표 6> 미국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문제 제기 및 상대국의 반응

총리	파트너	일본 총리가 강조한 전략 목표	상대국의 반응
고이즈미	노무현	납치문제의 해결(한일 공조 강조)	필요한 경우 지원
	부시	납치문제 해결의 미·일 공동 대응	
아베	노무현	납치문제 해결(일본주권 강조)	지속적 협력 약속
	부시	납치문제 해결의 미·일 공동 대응	
후쿠다 (福田康夫)	노무현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	이해를 표명
	이명박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	한·미·일 3국 협력 강조
	부시	납치문제 해결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협력	납치문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언급
아소 (麻生太郎)	이명박	납치문제 해결(중대한 인권침해)	한국에도 납치 피해자 존재
	부시	납치 및 핵 문제 해결 미·일 공동 대응	
하토야마	이명박	납치문제 해결의 한일 공동 대응	
	오바마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 미·일 공동 대응	
노다 (野田佳彦)	이명박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지지와 협력을 표명
	오바마	납치문제 해결	일본에 대한 협조 약속

자료: ‘일한정상회담’ http://www.kr.emb-japan.go.jp/rel/r_conf/r_confList.htm; ‘Japan-U.S Summit Meeting’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검색일: 2013.6.6).

10월 3일)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6자회담에서 납치자 문제 등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 현직 유엔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과 반기문의 총고³⁹⁾와 북한의 반발⁴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6자회담

39) 『동아일보』, 2006년 5월 16일.

40) 북한은 일본의 납치자 문제 제기에 반발하여 일본을 향해 6자회담에서 빠지라고 요구하였으나, 미국, 한국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동아일보』, 2003년 10월 9일.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은 ‘6자회담 목표달성에 있어 중요한 멤버국가’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Press Conference 22 July 2005’, <http://www.mofa.go.jp/announce/press/2005/7/0722.html#6>(검색일: 2013.6.1).

제1차 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6자회담 내내 납치문제를 강조하였다.

일본 대표는 제1차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이 핵문제 해결에 근거하여 경제적 협력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⁴¹⁾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9.19공동선언에 ‘북·일 간 미해결된 관심사 해결’이라는 표현으로 반영되었고 2·13합의에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구성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2007년 3월과 9월에 진행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북한이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납치문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일본은 2·13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⁴²⁾

2) 의회와 내각의 압력행사 전략

의회와 내각은 납치문제 개선을 위해 여론형성 전략과 병행해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경제

41) ‘Press Conference 18 November 2003’, <http://www.mofa.go.jp/announce/press/2003/11/1118.html#5>(검색일: 2013.6.2).

42) ‘Press Conference b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aro Aso’, http://www.mofa.go.jp/announce/fm_press/2007/8/0807.html#3(검색일: 2013.6.8).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6자회담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참여국들은,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내 정치 상황이나 양자문제를 6자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원칙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8년 7월 12일.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북 중유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일부 참여국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동아일보』, 2007년 2월 14일.

제재가 포함된 북한 인권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내각은 외교력을 동원하여 유엔인권레짐⁴³⁾에서 유럽연합, 미국 등과 협력하여 납치문제가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 채택시키고 있다.

(1) 의회의 북한 인권법 등 북한제재 법률 제정 및 집행

2006년 6월 12일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는 제164회 제7호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인권법」을 심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공산당은 이 법에 규정된 탈북자 보호 및 지원 규정이 탈북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내정간섭에 해당하고, 이 법 자체가 북-일교섭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3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납치문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⁴⁴⁾ 이후 이 법률안은 중의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06년 6월 23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2004년에 대북 경제제재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해 둔 두 개의 대북 경제제재법, 즉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외환 및 무역법」의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되었다.⁴⁵⁾

북한 인권법의 목표는 이 법 제2조(국가의 책무)에 나타나 있듯이

43) 유엔인권레짐이란, “국제관계의 인권 영역에서 유엔의 기대가 집약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원리들, 규범들, 규칙들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들”을 말하며, 유엔현장기구인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와 조약에 근거한 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Sang Soon Lim, “The Engagement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2, No. 2(2012), p. 84. 이 글에서 유엔인권레짐은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를 의미한다.

44)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對處に關する法律案起草の件,”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kaigiroku.htm(검색일: 2013.6.9).

45) 이준규, “일본 북한 인권법 통과 의미와 전망,” 『통일한국』, 제24권 7호(2006), 69쪽.

<표 7> 납치문제 개선을 위한 대북 제재 관련 법률 조항 및 내용

제재 관련 법률	관련 조항	제재 내용
북한 인권법	제7조	특정선박의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제3조 1항), 외환 및 무역법(제10조 1항)의 조치
특정선박의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제3조 1항	특정선박의 일본 항구 입항 금지
외환 및 무역법 (제10조 1항~7개의 제재조항 명시)	제16조 1항 제21조 1항 제23조 4항 제24조 1항 제25조 6항 제48조 3항 제52조	외환 지급의 정부 허가 의무 부과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대외 직접투자 내용의 변경 및 중지 수출, 수입에 수반되는 자본거래 허가 의무 용역 거래의 허가 의무 부과 수출의 허가 의무 부과 수입의 승인 의무 부과

자료: 『特定船舶の入港の禁止に關する特別措置法』(2004년 6월 18일 발효),⁴⁶⁾ 『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4년 2월 16일 개정)⁴⁷⁾

납치 피해자들의 전원 귀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하여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제재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의 법률에 명시된 대북 경제제재 조항들은 이후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2009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2010년 한국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매우 신속하게 집행되었다.⁴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준비해둔 이러한 대북 제재법이 없었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북한을 제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 정

46) http://www.shugiin.go.jp/itdb_housei.nsf/html/housei/15920040618125.htm?OpenDocument(검색일: 2013.6.8).

47) http://www.shugiin.go.jp/itdb_housei.nsf/html/housei/15920040216001.htm?OpenDocument(검색일: 2013.6.9).

48) 자세한 대북제재 전개 과정은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64~67쪽 참고.

부는, 이러한 제재 결정에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었으며 특히,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에 성의 있는 대응을 취해오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⁴⁹⁾ 그리고 현재 발효되어 있는 제재들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이다.⁵⁰⁾

(2) 유엔인권레짐과의 협력: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및 채택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유엔인권위원회(2006년에 인권이사회로 개편)와 유엔총회에서, 납치문제가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결의안들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사회의 다수 국가에 의해서 해당 국가가 문제 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된 국가는 위신과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⁵¹⁾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투표 결과 및 납치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납치와 관련된 의결 내용도 2003년 ‘해결할 것’, 2004년 ‘시급히(urgently) 해결할 것’, 2005년 ‘납치 피해자를 즉각 송환할 것’으로 강도가 높아졌다. 2006년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개편된 이후에도 납치자 문제가 결의 내용에 계속 포함되었으며 납치 피해자가 ‘외국인’에서 ‘다른

49) ‘對北朝鮮措置’, <http://www.rachi.go.jp/jp/ratimondai/syousai.html#rm01>(검색일: 2013.6.9).

50) “Press Conference b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asahiko Koumura,” http://www.mofa.go.jp/announce/fm_press/2008/5/0527.html#3(검색일: 2013.6.9).

51) 임상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북한학연구』, 제8권 2호(2012), 363쪽.

<표 8> 유엔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결과 및 납치 관련 내용

	투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납치 관련 내용
2003.4.16 (59차 인권위원회)	28 : 10 : 14	외국인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
2004.4.15 (60차 인권위원회)	29 : 8 : 16	외국인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
2005.4.14 (61차 인권위원회)	30 : 9 : 14	외국인 납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북한은 납치 피해자를 즉각 송환할 것
2008.3.27 (7차 인권이사회)	22 : 7 : 18	외국인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를 국제 사회가 우려함
2009.3.26 (10차 인권이사회)	26 : 6 : 15	다른 국가 국민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를 국제 사회가 우려함
2010.3.25 (13차 인권이사회)	28 : 5 : 13	
2011.3.24 (16차 인권이사회)	30 : 3 : 11	

자료: 유엔문서 E/CN.4/RES/2003/10, E/CN.4/RES/2004/13, E/CN.4/RES/2005/11, A/HRC/RES/7/15, A/HRC/RES/10/16, A/HRC/RES/13/14, A/HRC/RES/16/8.

국가 국민'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11)에 따라 납치문제가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되고 있다. 유엔총회 투표 결과와 납치 관련 내용을 <표 9>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납치 관련 내용도 60차 총회 최초 결의 이후, 피해 대상이 외국인에서 다른 주권국가 국민으로 구체화되었고 요구사항도 납치 피해자의 즉각 송환으로 명확해졌다. 유엔총회는 유엔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 표 9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투표 결과와 납치 관련 내용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납치 관련 내용
2005.12.16 (60차 유엔총회)	88 : 21 : 60	미해결 납치문제를 심각히 우려함
2006.12.19 (61차 유엔총회)	99 : 21 : 56	다른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외국인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를 우려함
2007.12.18 (62차 유엔총회)	101 : 22 : 59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납치문제를 심각히 우려하며, 납치 피해자를 즉각 송환할 것
2008.12.18 (63차 유엔총회)	94 : 22 : 63	
2009.12.18 (64차 유엔총회)	99 : 20 : 63	
2010.12.22 (65차 유엔총회)	106 : 21 : 55	
2011.12.19 (66차 유엔총회)	123 : 16 : 51	

자료: 유엔문서 A/RES/60/173, A/RES/61/174, A/RES/62/167, A/RES/63/190, A/RES/64/175, A/RES/65/225, A/RES/66/174.

회원국의 의사가 모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엔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결의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하여 북한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납치 피해자의 전원 귀국이다.

3. 납치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내외적 대응: 내부 단결 강화 및 역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각과 의회는 여론형성 전략과 압

력행사 전략을 통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납치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하여 납치문제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립하고,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를 내부 단결 및 선군정치 의 합리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범죄를 강조하면서 역공을 펼친다.

1)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의 『로동신문』 기사를 분석해보았을 때,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납치를 인정하지 않는 ‘전면 부인기’, 두 번째는 납치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기’, 세 번째는 ‘완전 비난기’이다. 세 시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1991년 5월 20일 제3차 북·일국교정상화 본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에 납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때부터 2002년 9월 18일 제1차 북·일정상회담까지의 시기이다. 북한은 이 기간에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에 대하여, “일본의 언론들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납치문제를 가지고 우익보수 세력이 앞장서서 소동을 피우고 있으며,”⁵²⁾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⁵³⁾고 하면서 납치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북·일국교정상화 3차 회담에서는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에 대하여,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⁵⁴⁾하였다. 하지만 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52) 리현도, “일본반동들의 빼뜰어진 소리,” 『로동신문』, 2002년 4월 5일.

53) 백문규, “일본군국주의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로동신문』, 2002년 6월 13일.

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납치사건을 인정한 이후 북한은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로동신문』 등 대중 보도 자료에서 납치사건을 부정하는 언론 기사가 사라졌다.

두 번째 시기는, 2002년 9월 평양선언 이후부터 2007년 9월 2차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때까지이다. 이 시기 북한은, 납치사건이 “우리 인민들 속에서 개별적 사람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⁵⁵⁾이자 “불미스러운 사건”⁵⁶⁾이고, “비정상적인 개별적 현상”⁵⁷⁾으로서, “그에 대해 조선은 공식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⁵⁸⁾했다고 하면서, 납치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세 번째 시기는, 2007년 9월 제2차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이후 시기이다. 북한은 2차 북·일 실무그룹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납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기사와 논문을 공식 간행물에 일체 게재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일본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 돌려 보내라는 식의 생억지”⁵⁹⁾를 부리면서, “납치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 악랄한 여론전·외교전과 함께 제재 책동에 전례 없이 발광”⁶⁰⁾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납치문제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미끼”⁶¹⁾로 활용하

54) 高崎宗司, 『檢証 日朝交渉』(東京: 平凡社, 2004), 52쪽.

55) 김남혁, “무엇을 노린 구걸놀이인가,” 『로동신문』, 2003년 10월 28일.

56) 리현도, “6자회담 핵방군의 간특한 술책,” 『로동신문』, 2007년 8월 1일.

57) 김중손, “비도덕성과 추악성을 드러낸 정치난쟁이,” 『로동신문』, 2004년 11월 29일.

58) 조선중앙통신, “6월 1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2006년 6월 15일.

59) 리현도, “일본특유의 철면피한 행위,” 『로동신문』, 2007년 10월 11일.

60) 리경수,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파산은 필연적이다,” 『로동신문』, 2007년 12월 19일.

61) 백문규, “일본을 국제적 고립과 파멸에 몰아가는 대조선적대시 정책,” 『로동

기 위해 “국제 무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⁶²⁾고 하면서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2) 일본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내적 활용: 내부 단결 강화 및 선군정치 정당화

북한 정부는 『로동신문』 기사를 통하여, 일본이 제기하는 납치문제를 내부 단결 강화와 선군정치 정당화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두 가지 논리구조를 정립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이 북한을 재침하기 위한 구실로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단결과 선군정치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 고조 논리구조’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가 과거의 인권범죄에 관한 정치적 기억을 선명하게 만든다⁶³⁾는 점을 이용하여, 일본의 과거 인권범죄로 인한 식민지 조선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그 피해의 원인이 ‘힘’이 약했기 때문이며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부 단결과 선군정치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교훈 논리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논리구조 정립과 함께 일본이 최근에 저지르고 있는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인권침해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1) 일본의 재침 의도 강조: 위기의식 고조 논리구조

북한은 “일본과의 대결이 곧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⁶⁴⁾이라는

신문』, 2008년 12월 18일.

62) 조택범, “파렴치성의 극치,” 『로동신문』, 2010년 10월 6일.

63) 양기웅, “북일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 『KNSI 현안진단』, 제75호(2007), 4쪽.

관점을 견지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 아래,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군사비 지출 국가로서 자위대 무력을 현대화·기동화·장거리화하는 동시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개편”⁶⁵⁾하고,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책동을 미친 듯이 다그치고”⁶⁶⁾ 있으며,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와 자위대의 무기 사용 합법화 책동을 통해 군사대국화와 침략 준비를 완성”⁶⁷⁾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전쟁 준비는 모두 아시아를 다시 정복하여 과거 대동아 공영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며,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북한”⁶⁸⁾이라고 강조한다.

해외 침략을 위한 첫 대상으로 북한을 설정한 일본이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집요하게 거들면서 압박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침략과 잇닿아”⁶⁹⁾있으며,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주장하면서 북·일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책동”⁷⁰⁾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일본 내에 불러일으켜 북한을 침략하고자 하는 것”⁷¹⁾이라고 했다.

이러한 침략에 대비해서 북한은,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64) 김창혁, “‘미일안보체계’는 침략적인 군사동맹체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제54권 4호(2008), 93쪽.

65) 최학철, “해외침략책동의 본격적인 단계,” 『로동신문』, 2006년 12월 22일.

66) 김종손, “더욱 드러나는 위험한 해외팽창흉계,” 『로동신문』, 2005년 11월 5일.

67) 조택범, “발광적인 해외침략책동,” 『로동신문』, 2009년 8월 18일.

68) 조택범, “자살적인 대결광증,” 『로동신문』, 2010년 3월 16일.

69) 김종손, “범죄력사를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망증,” 『로동신문』, 2007년 3월 7일.

70) 김종손, “정치난쟁이들의 부질없는 소동,” 『로동신문』, 2008년 11월 10일.

71) 백문규, “군국주의 독을 뽑다가는 제명을 못산다,” 『로동신문』, 2009년 2월 2일.

반제 군사전선을 강화”⁷²⁾하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온 인민이 단결하여 평화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⁷³⁾고 강조한다.

(2) 일본의 식민지 범죄 강조: 역사적 교훈 논리구조

2002년 10월 25일 일본 정부는, 일시 방문을 위해 일본에 입국한 납치 피해자 5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⁷⁴⁾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29일과 30일에 개최된 제12차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이 파행되었다.

북한은 그다음 달인 200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박사 김덕호의 이름으로,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 강제연행 제도의 범죄성”이라는 제목의 연속 기사 4편을 『로동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연속 기사를 통해, 식민지 기간에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면서, 일본은 “이러한 과거범죄의 청산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몇 명의 납치 피해자 문제 같은 것으로 반공화국 소동을 피우고 있다”⁷⁵⁾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일본이 제기하는 납치 피해자 문제라는 인권문제와 일본의 과거 ‘식민지 인권범죄’를 긴밀히 연결시켰으며, 일본의 납치 피해자 문제 제기가 일본의 과거 식민지 인권범죄를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72)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로동신문』, 2009년 10월 12일.

73) 백문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 『로동신문』, 2008년 1월 30일.

74) “Press Conferece 25 October 2002,” <http://www.mofa.go.jp/announce/press/2002/10/1025.html#66> (검색일: 2013.6.11).

75) 리현도,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라,” 『로동신문』, 2002년 12월 17일.

북한은 이러한 논리구조를 이후에 좀 더 구체화하였다. 먼저, 다음 해인 2003년 1월 31일 “일제의 관병문서들을 재조사한 결과 일제 시기에 강제연행, 납치된 사람의 숫자가 600만 명이 아니라 840만 명”⁷⁶⁾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이 식민지 기간에 “조선인 100만여 명을 학살하고 840만여 명을 강제연행 및 납치하였고, 20만 명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⁷⁷⁾는 하나의 ‘일본 식민지 범죄에 관한 명제’가 완성되었다. 이후 북한 정부는 이 명제와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를 연결하는 기사를 『로동신문』에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일본인 납치문제와 일본의 ‘식민지 인권범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였다.⁷⁸⁾

이와 함께 과거 조선이 일본에 의해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 이유는, “한 세기 전의 조선이 힘이 약하여 식민지 약소국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⁷⁹⁾이며, “변변한 군대가 없어 외세의 침략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날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기 때문”⁸⁰⁾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비참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제국주의 열강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필승불패의 군사강국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은 강인한 정신력을 지녀야 하고, “변함없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 자주정치가

76) 김혜성, “일제가 840만여 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징발,” 『로동신문』, 2003년 1월 31일.

77) 김종손, “악의에 찬 험담은 백해무익하다,” 『로동신문』, 2003년 9월 24일.

78) 대표적인 기사로는 백문규, “정치사기군의 역겨운 추태,” 『로동신문』, 2003년 10월 19일; 조성철, “제 집안의 납치사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로동신문』, 2008년 11월 20일 등이 있다.

79) 사설,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2008년 2월 16일.

80) 채일출, “범죄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낼 것이다,” 『로동신문』, 2009년 11월 17일.

실시”⁸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일본의 최근 인권침해 고발: 일본 주장에 대한 정당성 약화

납치 및 인권문제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던 북한은 2006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포괄병행협에서 일본에 의한 북한 주민 납치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을 『로동신문』에 자세히 게재하였다. 북한이 제기한 내용은, “조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국민들을 유괴·납치해간 일본 비정부기구의 탈을 쓴 자들의 범죄행위를 일본에 항의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주면서 해명과 진상 규명, 일본인 범죄자 인도,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⁸²⁾한 것이다.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북한이 “체포영장을 발급한 납치 범인들을 무조건 인도”⁸³⁾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발송하여 “일본의 북한난민 구호기금이라는 조직이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을 포함한 북한 시민의 유인·납치·인신매매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반(反)공화국 음모조직과 기구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⁸⁴⁾고 고발하였다.

북한은 조총련을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 강제련행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⁸⁵⁾이라고 새롭게 개념 규정하면서, 일

81) 김종손,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 담보,” 『로동신문』, 2011년 11월 13일.

82) 김종손, “공화국 공민납치 범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06년 4월 1일.

83) 리현도, “대미추종에 환장한 자들의 광대극,” 『로동신문』, 2006년 4월 18일.

84) 유엔문서 E/CN.4/2003/G/61.

85) 리현도, “엄중한 정치적 테로 행위,” 『로동신문』, 2008년 1월 29일.

본 정부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반복 감정을 고취시켜 우익반동들이 총련기관들을 협박하고, 총련학교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⁸⁶⁾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일본 당국이 “총련과 그 성원들에 대하여 비렬한 탄압, 인권침해”⁸⁷⁾를 감행하고 있으며, “재일조선학교들의 민족교육을 저애하고 억누르려고”⁸⁸⁾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일본의 대외적 압력 전략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역공과 거부 및 적절한 활용

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으로 응대하고 있다. 첫째, “2002년 9월 17일 일본 총리 방북 때 채택된 평양공동 선언에서, 납치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전국적인 조사가 행해졌으며, 그 결과를 일본 측에 알려주었다. 우리의 충실한 의무 수행 결과 납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⁸⁹⁾는 주장이다. 둘째,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 사회에 반공화국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납치문제와 인권문제를 조작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과거 식민지 시절에 저지른 범죄, 즉 840만 명의 강제연행과 납치, 100만 명의 살해, 20만 명 여성의 군대 성노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⁹⁰⁾는 주장이다.

86)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2008년 3월 평양,” 『로동신문』, 2003년 8월 4일.

87) 리현도, “무모한 단계에 이른 반총련 소동,” 『로동신문』, 2005년 12월 5일.

88) 리경수, “악랄한 대조선 적대의식의 발로,” 『로동신문』, 2011년 6월 11일.

89) 유엔문서 A/HRC/13/13 Para 83.

북한은 이러한 주장에 입각하여 국제 사회에 일본의 식민지 시절 범죄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공을 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엔인권레짐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조작된 납치문제와 인권문제에 기초하여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인권 개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결의안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1) 일본의 과거 인권범죄 제기를 통한 역공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대표 발언 등을 통하여 일본의 과거 식민지 시절 범죄를 비난함과 동시에, 일본이 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과거 및 현재의 인권범죄를 제기한 것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북한의 일본 인권범죄 문제 제기(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날짜	토의 안건	주요 제기 문제
59차 인권위원회	2003.3.25	인종차별	식민지 범죄 ⁹⁾
	2003.4.10	여성 권리	위안부 문제
60차 인권위원회	2004.3.22	인종차별	재일조선학생 차별문제
	2004.4.5	여성 인권	위안부 문제
61차 인권위원회	2005.3.21	인종차별	식민지 범죄
	2005.3.23	모든 나라 인권 상황	인권 개입 비난
	2005.4.7	여성 인권	위안부 문제
4차 인권이사회	2007.3.28	인종주의, 인종차별	조총련 탄압문제
6차 인권이사회	2007.9.25	(전체 회의)	식민지 범죄, 조총련 탄압문제

자료: 『로동신문』,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사.

9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r.Choe Myung Nam,’ <http://www.un.org/webcast/unhrc/archive.asp?go=060919> (검색일: 2013.6.10).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대표연설을 총 9회 실시하였다. 주요문제의 제기 빈도를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위안부 문제로 6회였으며, 그다음이 대량학살과 강제연행 문제 3회, 재일조선인 탄압 및 차별 문제 3회, 인권 개입 문제가 1회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시절 인권범죄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유엔총회 안건 토의 및 전체회의 연설을 통하여 일본의 과거 및 현재의 인권범죄를 비난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북한 대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총회에서 일본의 인권범죄를 비난하는 대표연설을 매년 평균 2회 진행하였다. 주요 문제의 제기 빈도를 살펴보면 총 12회 연설 중 위안부 문제가 7회, 조총련 탄압문제가 3회, 대량학살 문제가 2회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유엔총회라는 국제 무대를 활용하여 일본의 과거 식민지 범죄와 현재의 조총련 인권침해 문제를 비난했으며, 특히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호소력이 강한 위안부 문제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대표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는 연설에 집중했는데 이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가 북한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1) 식민지 범죄에는 위안부 문제, 대량학살 문제, 강제연행 문제가 포함된다.

92) 유엔총회 전체회의 북한대표 연설 <http://www.un.org/en/ga/sessions> (검색일: 2013.6.10).

<표 11> 북한의 일본 인권범죄 문제 제기(유엔총회)

	날짜	토의 안건	주요 제기 문제
58차 유엔총회	2003.10.16	여성 진보	위안부 문제
	2003.11.10	평화문제	대량학살 문제
59차 유엔총회	2004.10.14	여성문제	여성 관련 과거범죄
	2004.10.26	인권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문제
60차 유엔총회	2005.10.12	여성문제	위안부 문제
61차 유엔총회	2006.9.26	(전체회의)	일본 과거 침략사
	2006.10.9	(3위원회 전체회의)	위안부 문제
62차 유엔총회	2007.10.2	(전체회의)	조총련 탄압 문제
	2007.10.31	(3위원회 전체회의)	식민지 범죄, 조총련 탄압문제
63차 유엔총회	2008.9.27	(전체회의)	일본의 과거역사 미청산 문제
	2008.10.14	(3위원회 전체회의)	위안부 문제
	2008.11.19	유엔안보리 개혁	조총련 탄압 문제

자료: 『로동신문』,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사, 유엔총회 전체회의 북한대표 연설(2003~2011)⁹²⁾

(2) 유엔인권레짐 결의안에 대한 거부와 적절한 활용

북한은 유엔인권레짐에서 채택되고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포함 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채택 절차, 결의안의 제출 의도, 주요 제출국의 자격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거부 의사를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를 통해 강력히 표명⁹³⁾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모든 북한인권결의안은 채택 과정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에게 우선 공고하고 협의하라는 국제인권 분야의 전통적이고 공동된 실행이 완전히 무시되었다”⁹⁴⁾ 즉 “일본은 유럽연합, 미국과 함께 비밀스럽게 결의안 초안을 준비했고 그것을 기습전의 형태로 마지막 순간에

93) 유엔문서 E/CN.4/2005/G/13.

94) 유엔문서 A/HRC/16/G/2.

제출하였으며, 막 뒤에서 압력과 협박을 통해서 그것의 채택을 요구했다. 심지어 유엔총회에서까지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다른 국가에 강요했다.”⁹⁵⁾ 북한인권결의안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 국가들의 속임수, 막 뒤 압력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와 독단을 통해서 강제로 채택된 것”⁹⁶⁾이다.

둘째, 북한인권결의안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며 북한은 인권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당하는 희생국⁹⁷⁾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한 음모의 결과물로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이다.⁹⁸⁾ “2003년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될 당시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북한과 유럽연합 간의 인권 대화와 협력이 탁월한 국면에 있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의 숨은 진짜 목적은 인권을 활용하여 북한의 사회체제와 국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⁹⁹⁾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1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으며”¹⁰⁰⁾ 특히, 일본은 “일단 북한이 제거되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가 잊힐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재침입을 위한 그들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치문제, 인권문제를 조작해내고 있는 것”이다.¹⁰¹⁾

95) 유엔문서 A/HRC/10/G/6.

96) 유엔문서 A/HRC/5/G/11.

97) “Statement by H. E. Mr. Pak Kil Yon,” http://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portals/1/statements/634213566939062500kp_en_pdf (검색일: 2013.6.10).

98) 유엔문서 A/HRC/2/SR.16 Para 30.

99) 유엔문서 A/HRC/7/G/3.

100) 유엔문서 E/CN.4/2004/SR.50 Para 38.

101) 유엔문서 A/HRC/2/SR.16 Para 31.

셋째, 주요 제출국인 일본, 미국, 유럽연합이 많은 인권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조선을 40년 이상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840만 명을 강제 징병·납치했고, 100만 명을 학살했으며, 20만 명을 군대 성노예로 끌고 가는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¹⁰²⁾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선과 아시아에서 감행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 학살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전범국”이다.¹⁰³⁾ 한편,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여 시민을 살해”¹⁰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관타나모 만,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와 한반도 내 비밀 감옥에서 시민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위협을 지속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 분단을 유지시킴으로써 한국민들의 인권 실현을 막고 있다.”¹⁰⁵⁾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인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¹⁰⁶⁾ “유럽연합의 많은 회원국 사이에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¹⁰⁷⁾

북한은 위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납치문제가 포함된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치화, 선별화 그리고 인권 분야의 이중 기준의 극심한 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¹⁰⁸⁾ 있다.

102) 유엔문서 A/HRC/10/G/6.

103) “Statement by H. E. Pak Kil Yon,” http://www.un.org/en/ga/63/generaldebate/pdf/dprkorea_en_pdf (검색일: 2013.6.11).

104) 유엔문서 A/HRC/10/G/6.

105) 유엔문서 A/HRC/2/SR.16 Para 54.

106) 유엔문서 A/HRC/4/SR.20 Para 29.

107) 유엔문서 E/CN.4/2004/SR.50 Para 38.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적 인권협력을 거부하는 이유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활용한다. 즉 “선별적인 공격과 협력은 양립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결의들”¹⁰⁹⁾이다. “이러한 장애물이 일단 제거되고 적절한 조건과 상황이 제공되면 북한은 자발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권조약과 규약들에 가입할”¹¹⁰⁾ 뿐만 아니라,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¹¹¹⁾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4월 식량권 특별보고관이 요구한 북한 방문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2009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주제별 보고관의 접근에 협력하도록 북한에 촉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¹²⁾ 이와 함께, 2008년 유엔인권대표가 북한에 기술적 지원 등을 제안했을 때, 북한 대표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 인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¹¹³⁾

4. 결론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및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08) 유엔문서 A/HRC/13/13 Para 5.

109) 유엔문서 A/HRC/WG.6/6/PRK/1 Para 86.

110) 유엔문서 A/HRC/13/13 Para 50.

111) 유엔문서 E/CN.4/2005/G/13.

112) 유엔문서 A/64/319 Para 15.

113) 유엔문서 A/63/332 Para 20~22.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및 의회는 납치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본 귀국,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충분한 설명 제공, 납치범의 인도를 3대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및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의 세 가지 전략 목표와 일본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여론형성 전략 및 압력행사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모든 전략방법이 ‘납치 피해자의 일본 귀국’이라는 전략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북·일관계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세 가지 전략 목표 중 납치 피해자의 귀국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며, 여기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북·일 간의 협상은 급격히 진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일본의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에 대하여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외부 개입을 거부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나오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결단과 선언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인 납치문제는 단순한 형사범죄를 넘어선 국가범죄문제이며,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중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2002년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만이 납치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고 납치 피해 생존자 5명의 일시 귀국, 납치 피해자 가족 8명의 일본 영구 귀국,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등 납치문제와 관련된 주요 결정이 1·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김정일이 두 차례의 북·일정상회담에서 설정해준 납치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¹¹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유일수령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서

김정일이 설정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수령 김정은에게만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일본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납치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여론형성 전략과 압력행사 전략의 강도를 낮추고,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 특히, 북·일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강경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가해국에서 피해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¹¹⁵⁾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정책의 지속은 납치문제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전략 목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7월 28일 / 채택: 7월 31일

114) 일본인 납치자는 총 13명이며 그중 5명은 2002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8명은 사망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재조사는 가능하지만, 재조사를 통해 생존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를 찾아내 귀국시켜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일보』, 2008년 8월 25일.

115) *New York Times*, December 17, 2006.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정일 선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2) 논문

김창혁, “‘미일안보체계’는 침략적인 군사동맹체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역사 법학』, 제54권 4호(2008).

박희철, “일본의 국가통치제도는 군국주의의 재생부활을 추구하는 반동적인 제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역사 법학』, 제52권 3호(2006).

3) 기타

『로동신문』, 2002년 1월~2011년 12월.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2) 논문

강태훈, “북일수교의 전망과 한일관계,” 『일본학연구』, 제19집(2006).

김동한,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북한학연구』, 제4권 2호(2008).

김준섭,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응,” 『국제평화』, 제4권 1호(2007).

치노이, 마이크(Mike Chinoy), 『북핵 롤러코스터』, 박성준·홍성걸 옮김(서울: 참언론 시사HN북, 2010).

손영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3권(2007).

양기웅, “북일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 『KNSI 현안진단』, 제75호(2007).

- 오일환, “북·일 평양 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26집(2003).
- _____, “북한 핵·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기술의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제30집(2008).
- 이기완,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의 본질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제19집 3호(2012).
- 이종국, “일본의 대북한정책의 변화: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27호(2008).
- 이준규, “일본 북한 인권법 통과 의미와 전망,” 『통일한국』, 제24권 7호(2006).
- 이평규,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2).
- 임상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북한학연구』, 제8권 2호(2012).
- Lim, Sang Soon, “The Engagement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2, No 2 (2012).

3) 기타

『동아일보』

3. 외국 자료

- Hughes, Christopher W., “‘Super-sizing’ the DPRK threat - Japan’s Evolving Military Posture and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49, No.2(2009).
- Rosenau, James N.,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New York: The Free Press, 1971).
- Shpard, Jon M. and Voss, Harwin L., *Social Problems*(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8).
- Horton, Paul B. et al.,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New Jersey: Printice Hall,

1997).

New York Times, December 17, 2006.

官報 号外 平成 十六年 十一月 三十日 “第百六十一回 國會 衆議院會議錄 制
十四号”.

高崎宗司, 『檢証 日朝交渉』(東京: 平凡社, 2004).

拉致問題對策本部, 『すべての拉致被害者の歸國をめざして—北朝鮮側主張の問
題点—』(東京: 拉致問題對策本部 事務局, 2011).

_____,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東京: 拉致問題對策本部事務局, 2013).

『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4년 2월 16일 개정).

月刊世界編輯部, “特集 日朝關係 「不正常」から「正常」へ,” 『月刊世界』, 制707
号(2002).

重村智計, 『最新 北朝鮮データブック』(東京: 講談社, 2002).

『特定船舶の入港の禁止に關する特別措置法』(2004년 6월 18일 발효).

和田春樹, “拉致問題と過去の清算,” 『拉致問題と過去の清算—日朝交渉を進
めるために』(東京: 彩流社, 2006).

荒木和博, “屈辱外交に「ノー・コイズミ」を,” 『月刊諸君』, 第36卷 7号(2004).

4. 기타

1) 전자매체 자료

<http://www.mofa.go.jp/announce/press/2005/7/0722.html#6> (검색일: 2013.6.1).

<http://www.mofa.go.jp/files/000006559.pdf> (검색일: 2013.6.1).

http://www.shugiin.go.jp/index.nsf/html/index_kaigiroku.htm (검색일: 2013.6.2).

<http://www.mofa.go.jp/announce/press/2003/11/1118.html#5> (검색일: 2013.6.2).

<http://www.rachi.go.jp/jp/shisei/index.html> (검색일: 2013.6.3).

http://www.kr.emb-japan.go.jp/rel/r_conf/r_confList.htm (검색일: 2013.6.6).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 (검색일: 2013.6.6).

<http://www8.cao.go.jp/survey/tokubetu/h24/h24-rachi.pdf> (검색일: 2013.6.7).

http://www.shugiin.go.jp/itdb_housei.nsf/html/housei/15920040618125.htm?Open

Document (검색일: 2013.6.8).

http://www.mofa.go.jp/announce/fm_press/2007/8/0807.html#3 (검색일: 2013.6.8).

http://www.mofa.go.jp/announce/fm_press/2008/5/0527.html#3 (검색일: 2013.6.9).

<http://www.mofa.go.jp/announce/media/2007/11/1102.html#2> (검색일: 2013.6.9).

<http://www.rachi.go.jp/jp/ratimondai/syousai.html#rm01> (검색일: 2013.6.9).

http://www.shugiin.go.jp/itdb_housei.nsf/html/housei/15920040216001.htm?Open

Document (검색일: 2013.6.9).

http://www.un.org/en/ga/65/meetings/generaldebate/portals/l/statements/634213566939062500kp_en_pdf (검색일: 2013.6.10).

<http://www.un.org/en/ga/sessions> (검색일: 2013.6.10).

<http://www.un.org/webcast/unhrc/archive.asp?go=060919> (검색일: 2013.6.10).

<http://www.mofa.go.jp/announce/press/2002/10/1025.html#66> (검색일: 2013.6.11).

http://www.un.org/en/ga/63/generaldebate/pdf/dprkorea_en_pdf (검색일: 2013.6.11).

<http://www.rachi.go.jp/jp/shisei/old.housin.html> (검색일: 2013.6.13).

<http://www.rachi.go.jp/shisei/taisaku/kettei.htm> (검색일: 2013.6.13).

http://www.shungiin.go.jp/itdb_housei_nsf/html/housei/16420060623096.htm?OpenDocument (검색일: 2013.6.14).

<http://www8.cao.go.jp/survey/index.html> (검색일: 2013.6.20).

2) 유엔문서

유엔문서 A/63/332.

유엔문서 A/64/319.

유엔문서 A/HRC/10/G/6.

유엔문서 A/HRC/13/13.

유엔문서 A/HRC/16/G/2.

유엔문서 A/HRC/2/SR.16.

유엔문서 A/HRC/4/SR.20.

유엔문서 A/HRC/5/G/11.

유엔문서 A/HRC/7/G/3.

유엔문서 A/HRC/RES/10/16.
유엔문서 A/HRC/RES/13/14.
유엔문서 A/HRC/RES/16/8.
유엔문서 A/HRC/RES/7/15.
유엔문서 A/HRC/WG.6/6/PRK/1.
유엔문서 A/RES/60/173.
유엔문서 A/RES/61/174.
유엔문서 A/RES/62/167.
유엔문서 A/RES/63/190.
유엔문서 A/RES/64/175.
유엔문서 A/RES/65/225.
유엔문서 A/RES/66/174.
유엔문서 E/CN.4/2003/G/61.
유엔문서 E/CN.4/2004/SR.50.
유엔문서 E/CN.4/2005/G/13.
유엔문서 E/CN.4/RES/2003/10.
유엔문서 E/CN.4/RES/2004/13.
유엔문서 E/CN.4/RES/2005/11.

The Strategy of Japan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on Abduction Issue

Lim, Sangsoon(Dongguk University)

So far, the abduction crim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cold war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s beyond one country. To solve this international problem as well as internal issue in Japan, Japanese government has used two prominent strategies composed of the announcement strategy and intervention strategy(pressure impose policy). This engagement mechanism has lasted since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 Japanese Prime Minister and the North Korean top leader.

To cope with the Japanese aggressive intervention mechanis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which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the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This strategy includes strong internal control and backfire to prevent its citizens from being affected from Japanese intervention.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ed more positive diplomatic activities than before to persuade other countries not to follow Japanese intention.

Keywords: Japanese abductio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gime, intervention, comprehensive respon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